

# “확인 번거러움 덜어” 환영...“방역체계 무너질라” 우려

## 방역패스 중단 첫날 표정

“방역 패스가 없어지면서 편해지긴 했는데, 영업제한이 빨리 풀려야 좋겠어요”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첫 날인 1일 광주시 동구 지역 식당에서는 점심 시간 길게 늘어선 줄이 사라졌다. 직원이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이 접종여부를 확인하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했다.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었던 기존 입장을 1주일도 안돼 바꾼 것으로, 지난해 11월 도입된 지 4개월만에 식당·카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11곳에서 백신 미접종자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방역패스 중단 조치로 식당 카페 등을 드나들 때마다 했던 ‘QR체크인’도 이날부터 사라졌다. 당장,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도 QR체크인 서비스를 1일부로 중단했다.

손님이 몰리던 점심·저녁 시간대 손님들의 접종여부와 QR체크인 기록을 확인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영업시간 제한조치까지 완화돼 실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둘러본 광주지역 식당·카페 등에서는 기존의 QR체크인 용도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이 모두 치워졌고 수기 방명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중단된 줄 모르고 식당 입구에서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QR체크인을 하려던 손님들 일부는 포털사이트의 ‘QR체크인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화면을 보고 방역패스·QR체크인 중단 사실을 알기도 했다. 짬뽕전문점에서 일하는 A(32)씨는 “백신패스

식당이 점심 줄서기 사라져 “영업시간 제한 풀려야 더 도움”

“코로나 확산세 거세지는데...” 선부른 방역패스 중단 걱정도



1일 정부가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도 일제히 QR체크인 서비스를 중단했다.

를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일일이 확인하는 게 번거롭고 손님들한테도 미안했는데 해제되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B(51) 씨도 “특히 나이 드신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 백신패스 확인할 때 짜증을 내거나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중단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될 영업시간·이용인원 제한 조치도 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북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C(58)씨는 “방역패스를 풀었으니 영업제한과 인원제한도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문행우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혼자 음식만 들고 나르고 백신접종 여부까지 확인하느라 몸이 열개라도 부족했는데 방역패스가 없어져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면서도 “식당 업주 대부분은 방역패스보다 영업시간 연장을 더 원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꾸면서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선거용 선심성 방역 정책 아니냐는 것이다.

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D(52)씨는 “지금도 방역 분수령”이나 “방역 최대고비”라는 말 등으로 지난 2년 간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온 게 한 두번이냐”면서 “그렇게 조이더니 확진자가 줄어드는 등 방역 방침을 바꿀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는 거 하면, 방역패스도 해제하니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세웠겠지만, 잇따른 방역 완화 신호가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더 높일 수 있다”면서 “아직 감염의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방역패스를 중단한 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림막 없이 위험한 작업 1일 오전 광주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모 철거업체 차량이 가림막이나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인도에서 작업을 벌였다. 작업 과정에서 인도와 차도 일부 낙하물이 떨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최해배 기자 choi@

## ‘건설기계 용도 변경 비리’ 2심서 뒤서리

돈 받은 전직 공무원 추징금 추가 매매업자들 보석 취소 법정 구속

뒷돈을 받고 건설기계 용도를 ‘영업용’으로 바꿔 등록해준 전직 공무원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던 추징금이 추가로 부가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건설기계장비 매매업자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무원과 공모,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전자기록등 위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 자치구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32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기계장비 매매업자들인 B(57), C(5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지만 이날 실행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자치구 건설기계 등록 접수 업무 등을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수급조절 대상인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용 신규 등록이 제한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 변경된 등록번호판을 매각해 수익을 내려고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까지 건설기계 수급 조절을 위해 3개 기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에 대해 영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했다.

형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 등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주변 범죄사실)로 적용해 기소한 공전자기록등위조 및 위조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화정 아이파크 사고 수습 서구, 한시기구 신설키로

광주시 서구가 화정 아이파크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한시기구 신설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아이파크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한시기구 설치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은 20여명 규모로 2과(피해지원과·사고수습지원과) 5팀(총괄지원·가족상가피해지원·중대재해예방·인주예정자대응·지역건축안전센터)으로 구성된다.

수습지원단은 이달 내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출범한 뒤 피해보상과 관련한 중재·지원, 산업·시민재해 예방, 건물 해체 및 재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은 “이번 사고로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조속히 피해보상 등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절도·무면허 운전 전력 해사 낙방생, 신원조사 위법 소송 패소

절도와 무면허 운전 전력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자신을 상대로 한 신원조사가 위법하다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해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시험에 응시했는데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까지 거친 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주된 문제는 군사안보지원부대(옛 기무부대)를 통해 나온 신원조사 결과였다. A씨는 10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에(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음) 처분을 받았고, 1개월 뒤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차 시험까지 불합격 사유가 없었던 A씨는 이로 인해 낙방했다.

A씨는 신원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고 기소유에 등 전력에 있다고 해서 2차 시험 응시자를 불합격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군사관학교 측이 A씨 불합격 판단에 활용한 신원조사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년부송치·기소유에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처분 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2심도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군사관학교는 기소유에 등 전력의 존재 자체만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기소유에·소년보호 처분이 사관생도 지원일로부터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보다 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